

주요 정책토론

본고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보건복지부의 후원아래 1999년 6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임.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일 시 : 1999. 6. 8. (화) 14:00~18:00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사 회 : 조남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주 제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방안
발 표 :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권찬덕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회장
 김득린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회장
 김정길 한국부랑인시설연합회 회장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병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배연창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은만기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이영찬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
이인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태수 현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재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정섭 한국정신요양협회 회장



□ 현황 및 문제점

- 1998년 12월말 현재 841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총 77,216명의 요보호자가 거주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수용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는 기여했다고 판단되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서비스전달체계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운영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재가복지의 확충을 통해 거주자의 사회복지귀를 도모하고 가능한 한 시설 입소를 억제함.
- 사회복지시설의 종별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를 통해 시설의 지역간 균형배치를 도모함.
- 입소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간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 시설선택권 보장과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시설보호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설거주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재정립

- 아동보호시설 중 아동직업보도시설은 교호시설로 전환하고 부랑아시설은 일시보호시설 또는 육아시설로 전환함.
- 노인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은 의료보호기능을 가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은 의료기능을 강화함.
- 여성복지시설 중 모자자립시설은 모자보호시설과 통합하고, 미혼모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시·도별로 최소 1개소의 시설을 유지함.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재활시설은 전문성을 확대하되, 일부는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함.
- 부랑인복지시설은 기능별 및 사회지지체계의 평가를 통해 일시보호기능을 가진 시설과 장기거주기능을 가진 시설로 분리함.

□ 사회복지시설의 수요공급추정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결핵 및 나병시설 제외)는 1998년말 현재 77,216명에서 2010년에 101,279명으로 24,063명(31.2%) 증가하고,
-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은 1998년말 현재 837개소에서 2010년에 1,288개소로 451개소(53.9%)가 증설되어야 할 것임.
- 시설 종별로 보면,
 - 아동복지시설 : 1,706명(8.7%) 감소 → 42개소(15.1%) 감소
 - 노인복지시설 : 22,808명(214.2%) 증가 → 312개소(156.0%) 증가
 - 여성복지시설 : 4,623명(134.4%) 증가 → 70개소(107.7%) 증가
 - 장애인복지시설 : 7,222명(43.2%) 증가 → 76개소(39.6%) 증가
 - 부랑인시설 : 1,504명(14.1%) 감소 → 30개소(88.2%) 증가
 - 정신요양시설 : 7,205명(44.9%) 감소 → 5개소(7.5%) 증가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방안

- 입소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voucher)제도를 도입함.

-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지원방식을 변경하고, 시설 종별 형평성을 제고함.
-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재단을 설립하고, 시설운영감독관제도를 도입함.
- 시설보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제를 도입함.
-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단위에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군·구의 시설운영비 부담제도를 폐지함.
- 지역 및 종별 시설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종별 신규 설치제한시도를 지정함.